

도 “대선 국정과제 선제 대응”

사전투표 독려·예산 결산 준비 철저·복지사각지대 점검 등도 병행키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도정 현안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선 국면을 앞두고 지역 공약의 국정 과제 반영을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사전투표 독려, 예산 결산 준비 철저, 복지 사각지대 점검 등 주요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현서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김관영 지사와 간부회의를 통해 논의된 도정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들이 정비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가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정책들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이 기획관은 먼저 오는 29~30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도청 4층 투표소 운영을 비롯해 직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산하 기관과 특수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 도의회 결산을 앞두고는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을 꼼꼼히 점검해 부진한 사업은 개선하고, 2025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서민 민생예산에 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산은 단순히 수치 정리가 아니라, 향후 예산 심사의 기준이 되



이현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이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하며 “결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브리핑에서는 차기 대선 이후를 겨냥한 정책 준비가 핵심으로 다뤄졌다.

이 기획관은 “전북의 지역 공약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향후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수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전북의 현안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최근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익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 도민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복지국과 함께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낮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건

환경연구원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식중독 예방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에만 전주·익산·남원 등에서 3건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북을 K-컬처의 중심지로 만들고, 향후 올림픽 유치 시 문화 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6월 6~7일 열리는 세계 관광 산업 컨퍼런스에 말레이시아 차관 등 국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에게 월 10만 원의 유족 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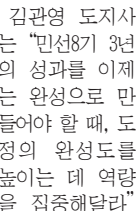
현재 손자녀·증손자녀 등 총 915명이 대상자로 파악됐으며,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시·군 예산 분담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유·무인 해양 모빌리티 AX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군산), △AI 기반 멀티오믹스·바이오반도체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육성(전북대 중심) 등 정부 공모사업 2건이 추진 중이다.

이 기획관은 “이들 사업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완성의 1년 향해 도정 전력투구”

김관영 도지사, 대선 이후 현안 대응 선제 주문



김관영 도지사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8기 3년의 성과를 이제 완성으로 만들어야 할 때, 도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집행실적을 점검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은 집행률을 점검해보고, 미진한 사업들을 통폐합하여 집행수요가 많은 사업에 재배치하는 등 집행성과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선 이후의 정책 과제도”를 도정 현안 추진의 ‘동력 확보’로 삼아야 한다”며, “올림픽정부유치위원회 출범 등 현안 대응은 물론,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반영과 도정질문 대응에도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최근 발생한 익산 모현동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며, “익산시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타 시군에 대응사례를 전파하여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과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화콘텐츠 분야와 관련해 “글로벌30대학 사업을 문화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당부하며, “산업 측면에서 일반제조 분야에 집중된 사업 편성을 문화콘텐츠 분야 진흥에도 안배하고,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관련 로드맵을 수립해 국가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공직자의 투표 참여는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5월 29일부터 이틀 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에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전 직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익산 모녀 비극 등 되풀이돼선 안돼”

민주 도당, 농수산대 실습생 화재 참사 등도 언급

실습 안전 점검·복지사각지대 해소 제도 개선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의 화재 사망 사고와 익산 모녀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깊은 애도와 함께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전주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 학생이 경남 지역 한 농장에서 현장 실습 중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익산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극심한 절망 끝에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이 전해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실습생과 유가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다”며 “실습생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실습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

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익산에서 벌어진 모녀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복지 시스템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신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더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두 사건을 단순한 사고나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실습생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은 교육 시스템의 기본이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선거를 거짓으로 더럽히지 말라”

“일부 후보들, 허위사실·왜곡된 주장 반복… 국민 기만행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대통령선거 TV토론과 공식 유세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허위사실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이 반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유권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공보단은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의견 표현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범죄 행위”라

고 강조하며, “정치권이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이 유권자를 오도하는 왜곡된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공보단은 또 “진실을 밝히고 선거의 품격을 지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자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선거 운동을 빈자한 무분별한 왜곡과 비방에 대해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수변도시, 향만배후 기업지원 특화 개발

신항만 2026년 개항 등 여건 반영 통합개발계획 변경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에서 시행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26일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처음 계획을 수립한 이후, 새만금 신항 입주 수요 증가와 새만금 신항만이 2026년 개항(2선식)함에 따라 향만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수변도시를 ‘향만배후+기업지원 특화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이번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

새만금 신항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향만물류, 연구개발(R&D), 첨단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 복합 용지를 배치했고, 신항만 크루즈 계획과 연계한 관광형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업의 제안이나, 공모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교통과 새만금 호소 수상교통 및 미래 도심항공교통(UAM)을 통한 운영할 수 있는 육·해·공 환승센터도 반영하며, 전력공급 시설을 모두 지중화해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다.

수변도시 중앙부 2개의 호소와 수로를 새만금 호소와 연결해 개방하고, 수로 폭을 15m에서 30m로 확대해 수변공간의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투표용지에

기표소 비치 기표용구 사용율”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본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이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나 이 역시 잘못된 정보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79조(무효투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연필이나 펜, 개인 도장 등으로 기표하거나, 정구의 기표용구로 정상기표 후 개인 도장 등을 투표용지에 또 찍으면 무효가 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경우에도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하여 무효처리 된다.

전북선관위는 표기 기한을 넘겨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해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인쇄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내 대선선거사범 28건 수사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전북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5일까지 모두 28건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중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은 25건, 유세방해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에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두차례 무단 철거 당했다”며 “철거를 한 기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는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하던 중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전국 탄소중립환경운동 활동가 2050명의 대표자들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전북 곳곳 이재명 후보 지지 움직임 계속

탄소중립특보단·장애인 가족들도 힘 보태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탄소중립특보단 “기후위기 대응, 이재명만이 해낼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탄소중립특보단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송승룡 탄소중립특보단장(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부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특보단 단장 10여명과 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프라 확대와 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당한 정부는 원전 예산을 1.498%나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예산은 43%나 삭감해 국제 흐름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위기는 해마다 그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전민적인 비상행동이 필요한 때”라

며,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의 본질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탄소중립특보단은 전국 2,050명의 특보단이 중심이 되어 향후 2,050만 명의 지지세력 확보를 목표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당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전국 각지의 특보단 단장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다졌다.

▲전북 장애인 가족 1만1652명 “포용 복지국가 실현할 적임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내 장애인 가족 1만 1,652명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차가운 세상의 벽을 녹여줄 따뜻한 손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는 밤마다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언제나 ‘내가 떠난 뒤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불안을 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동안 선거철마다 정치인의 약속에 희망을 걸었지만, 현실은 늘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장애인 가족의 삶은 다시 뒤로 밀려났다”며 “이번에는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재명 후보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준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가족들은 이 후보가 제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통합교육 강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기반 조성,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권 보장 등 다섯 가지 핵심 공약을 지지 이유로 들었다.

부모들은 “이 공약들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없는 날에도 우리 아이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도록 하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더는 배개를 눈물로 적시지 않도록 해 줄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가 정치 활동 전부터 오랜 시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깊이 천착해 왔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며 “그가 말하는 포용적 돌봄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가족들은 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소외된 국민이길 원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 갈 공동체와 따뜻한 사람 중심의 세상에 합한 자리를 보낸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